



지난해 12월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주의 수호·시민 연대로 다시 빛난 ‘광주 정신’

계엄 사태 1년에도 국회, 5·18 헌법 전문 ‘지지부진’
각 정당 ‘오월정신’ 헌법 수록…정신적 표상 삼아야

12·3 비상계엄을 통해 불의에 맞선 국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광주 5·18 정신’이 재조명됐다. 5·18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고 파면을 이끌어 낸 밑거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는 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긴급 담화는 연말을 맞아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어 총기와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들어닥쳤다.

4일 새벽 0시 7분께 국회 경내로 들어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현관을 통한 진입이 여의치 않자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0시 45분께 본청으로 침투했다.

무장한 계엄군을 지켜본 국민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그날처럼 국민들은 민주 헌정을 지키고자 국회로 달려갔다.

이 시각 광주 시민들도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으로 뒤흔들었다.

시민들의 가슴에는 80년 5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밤, 광주 도심에 울려 퍼진 시민군들의 가두 방송을 떠올렸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

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밤새 뜬눈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6시간여 만의 계엄 해제 선언을 지켜보며 광장을 지켰다.

‘불법 계엄에 맞서겠다’는 결의는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4일 자정이 넘은 시각, 광주시장 실국장 간부 회의에 이어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 시·구 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나 모임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은 인사를 대부분이 신속히 모였다.

이들은 1시 10분 연석회의의 결과를 발표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라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연석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와 시민사회는 시민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계엄 상황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을 구성해 불의의 권력에 지속적으로 저항했다.

매주 주말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계엄 규탄·탄핵 집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122일간 47차례 열리며, 헌정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아꼈었다.

이처럼 반헌법적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 헌정 질서 안에서 대통령 탄핵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

끌어낸 주역은 ‘시민’이었다.

특히 불의에 맞서면서 민주 헌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45년 전 신군부에 맞서 항거한 ‘5·18의 경험’과 ‘항쟁 정신’이었다.

때문에 45년 만에 다시 부활한 민주주의의 수호와 연대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 민주 헌정의 굳건한 정신적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을 앞두고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로 ‘헌법개정’(개헌)을 선정했다. 개헌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더욱이 국회, 그중에서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떠한 개헌에 대한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지역 정치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자 전 오월여머니회 관장은 “모두가 침묵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80년 5월 광주는 45년이 지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등대로 죽은 자들에게 응답하고 있다”며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정신에 빛을 갠아야 할 차례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5·18 항쟁은 시민 스스로 도시를 지켜낸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역사였다”면서 “민주공화국의 뿌리로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기록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내란의 밤’ 광주는 깨어있었다

긴박했던 당시 대응과정 공개
시민연대 등 ‘오월DNA’ 발현
12일까지 민주주의 주간 운영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전국 선포된 그 순간 광주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계엄 발표 10여 분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 지시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속속 시청으로 모여들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광주는 이미 ‘대응’을 시작했다. 마치 ‘오월의 DNA’가 다시 깨어난 듯했다.

그리고 1년, 광주는 ‘빛의혁명 정신’을 이어간다. 광주시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반헌법적 계엄 상황 당시 광주의 긴박했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확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광주시의 대응은 전국에서 가장 신속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체계가 가동돼 오후 11시 첫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2시간 뒤인 4일 오전 0시 11분 시장, 시의원, 시민사회, 5·18단체, 종교·학계 등이 참여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소집됐다. 연석회의에서는 “반헌법적 계엄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군·경에는 시민 보호, 공직자들에게는 시민 일상 안정을 주문했다.

시는 이 과정을 “오월 정신의 현대적 발현, 오월의 DNA가 불을 켜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실의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발표 이후에도 광주 대응은 계속됐다.

날이 밝은 4일 오전 9시, 시민들은 5·18민주광장으로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상황을 공유한 뒤 국회를 찾아 대통령 즉각 퇴진과 시민 일상 안전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공기관장 회의, 5·18단체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점검했고, 민생·안전을 책임질 ‘지역민생안전대책반’을 구성해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제안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무

광주시, 비상계엄·탄핵 정국 일지

12월3일	22시27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비상소집 연석
	22시43분	시장 청사 도착 및 최초 대책회의
	22시58분	간부 공무원 긴급 소집
	23시08분	긴급 간부회의
12월4일	00시05분	‘헌법수호 비상계엄무효선언’ 연석회의
	00시1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및 기결
	01시00분	반헌법적 비상계엄 무효 등 연석회의 결과 발표
	01시10분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
	04시27분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
	08시00분	국회 비상시국대회
	12시00분	5개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성명서
	14시00분	광주시민총궐기대회

리한 계엄을 방지할 ‘국회사전동의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했다.

시민들 역시 ‘광주의 민주적 연대’ 힘을 보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민들은 추운 겨울 금남로에서 매일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보여줬다. 극우 집회가 예고되었을 때 광주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다”며 불허 조치를 내렸다. 그 현장에서 시민들은 5·18의 대응정신을 실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떡국과 핫팩을 나누고,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광장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 나눔부스를 안내해 연대 공간을 행정이 함께 지켜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 대응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까지 ‘빛의 혁명, 민주주의의 주간’을 운영한다. 또 계엄 저지 1년이 되는 3일에는 광주공동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강기정 시장은 “12·3 불법계엄을 통해 우리는 오월정신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망월묘역을 ‘빛의혁명 발원지’로 조성하고, 당시 연대의 중심이었던 적십자병원을 리모델링해 오월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주주의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사업, 국가 NPU컴퓨팅센터 설립, AI도발리터 실증도시 조성 등의 추진을 통해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